

“작전 과정·분석 없어... 공수부대 ‘5·18 전투상보’는 가짜다”

군 출신 인사 3·7·11공수 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 분석 “각 부대별 기술 내용 모두 비슷... 마치 한 사람이 작성한 듯 77명 훈포장 받은 근거 문서인데 유공자 명단 빠져 엉터리”

“군(軍)에서 전투상보라는 것은 거칠게 요약하면 우리 부대가, 나아가 우리 부대 ××가 이 작전에서 이리이러하게 공을 세웠다고 상부에 자랑(보고)하는 문서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작전 유공자 표창이 이뤄지고, 반성도 뒤따르는 건데 (서류엔)공적도 없고 유공자 명단도 빠져있다. 완전히 엉터리다. 또 중요한 (작전에 대한) 분석과 교훈도 과정이 빠지고 담판 있다. 수학 문제 풀때 과정을 써야하는 것처럼 전투상보도 마찬가지다.”

3·7·11공수여단이 각각 작성해 과거 노무현정부 당시 군 과거사위 등에 제출한 전투상보(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를 살펴본 군 출신 인사 A씨가 해당 전투상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밝힌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다.

요약하면, 전투상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아예 생략됐거나 기술됐어도 형식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조작된 전투상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A씨가 생략했다고 밝힌 주요 항목은 일반적으로 전투상보에서 ‘부록’에 들어가야 할 공적 내용과 유공자 명단이다. 3공수, 7공수, 11공수여단이 각각 작성한 전투상보에는 하나같이 빠져있다.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영, 3공수여단장 최세창, 20사단장 박준병의 경우 5·18 유혈진압 직후(1980년 6월) 충무무공훈장을 받는 등 상무총장직전에 공을 세운 77명의 군인, 경찰 등은 훈포장을 받았는데, 훈포장의 근거가 되는 공적이 전투상보에 반드시 기술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특정 작전 유공자에게 훈포장이 수여됐다면 지금은 존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나 당시에는 제대로 된 ‘전투상보’가 작성됐고, 주요 작전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고 유공자와 유공내용이 구체적인

로 담겼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당시 훈포장이 장성, 영관 및 위관급 장교, 부사관(하사관)은 물론 사병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수여된 만큼 이들의 공적이 제대로 기술된 전투상보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에 서다.

부대별 주요 작전 전개과정을 상세히 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담는 ‘분석과 교훈’ 부분도 마찬가지다. 11공수여단의 경우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와 27일 새벽 전일빌딩 진압작전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전투상보를 보면 그에 따른 분석과 교훈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됐다.

A씨는 “전투상보에서 분석과 교훈 부분은 구체화가 핵심”이라며 “작전경과와 분석, 교훈이 구체화돼야 하는데 요약식으로 작성됐다. 수학 미적분 풀러면 과정이 드러나야 하는데, 문제와 답만 나와 있고 과정은 완전히 빠져있다. 또한 체류수기 형식의 주요 지휘관의 평가도 담겨야 하는데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6·25전쟁에서도 작전장교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은 그날 그날 전투마다 전투상보를 세밀하게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그림도 넣었다. 또 반드시 해당 작전의 유공자 명단과 유공 내용도 담았다”면서 “이러한 점을 두루 고려하면, 군에서 5·18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는 관계기관에 지금껏 제출한 전투상보는 가짜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도입부, 각 부대별 고유 임무 내용만 조금 다를 뿐, 전투상보 내용이 전부 비슷하다. 마치 한 사람이 작성한 듯한 느낌이 강하다”면서 “내가 아는 한 군에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전투상보는 여태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5·18 특별조사위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전두환 정부 80위원회 관련 자료. 특조위는 전두환 정부가 1985년 6월 80위원회를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두환 ‘80위원회’ 역사 쿠데타

1985년 국방부·보안사·靑·민정당·안기부 등 참여...5·18기록 왜곡·조작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3일 전두환 정권 당시 안기부(국정원 전신) 주도하에 만들어진 위원회가 5·18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는 당시 군 관계자는 물론 현역 군 관계자마저 특조위의 진상규명 작업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견고한 ‘침묵의 카르텔’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용기있는 군인과 시민의 제보가 절실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건리 특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85년 구성된 ‘80위원회’ 등 국가계획안을 통해 5·18 관련 역사적 사실이 왜곡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진상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태우 정부 하에서 1988년에 511 위원회 또는 511 연구반과 분석반을, 그보다 3년 앞선 전두환 정부 하에서 1985년 국무총리실과 국가안전기획부의 80위원회 등이 구성되는 등 정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전두환 정부는 1985년 6월 ‘80위원회’를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조위가 발굴한 1985년 6월 5일 관계장관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공부, 육군본부, 보안사, 치안본부, 청와대, 민정당, 안기부가 참여하는 가장 ‘광주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진상규명위원회는 광주사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 검토해 광주사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를 편성했다”며 “실무책임은 안기부 2과장이 담당하고 수집 정리팀, 분석작성팀, 지원팀 등 총 3개의 실무팀과 이들 실무활동을 관리하는 심의반으로 구성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1985년 6월 5일 관계장관 대책회의 자료에선 조직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광주사태의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위장 명칭을 80위원회 명칭이라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 차원의 기구 구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했던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80위원회’ 자료 발굴에 대한 의미와 관련, “1988년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실체가 알려진 511 분석반 이전에 이미 범정부 차원의 대응기구가 구

성되고 운영됐다는 사실을 정부 문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80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군 기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군 자료 일부를 확인했다”며 군인들의 증언이 담긴 5·18 ‘체험수기’ 사례를 들었다.

1981년 6월 8일자 체험 수기에는 “5·18 당시 계엄군이 ‘무류 썬’ 자세로 집단사격을 했다”는 군 간부 증언이 있지만, 1988년 군사연구소가 발간한 체험 수기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체험 수기의 수정과 변화에 80위원회와 같은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80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결과와 광주사태 백서의 존재 유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주관기관이었던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의 광주사태 백서 보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오늘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5·18연구자는 “당시 국정원(안기부)은 군 보안사의 허부 조직으로 취급되는 등 기관의 파위가 미미했던 시절”이라며 “관련 자료가 있을지, 있다면 유의미한 내용이 담겨있을지 회의적 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진상규명 조사과정에서 당시 군 관계자 및 현직 군 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참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미 40년이나 다 돼가는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 “왜 공연히 슬데없는 일을 해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느냐”는 식으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을 넘어 조직적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보전돼 있는 군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은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고 보전 연한의 경과 등으로 폐지됐으며, 존안된 자료 일부는 왜곡 또는 변질돼 있다”며 “특조위는 한마디로 ‘가짜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과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의혹의 진상규명을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 11일 출범해 약 40일 동안 조사활동을 해왔다. 이번 기자회견은 조사활동의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이 기간 특조위는 헬기사격 의혹에 관해 목격자를 포함한 19명을 조사했고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관해서는 조종사와 무장사 등 2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17 국제농업박람회
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 **전라남도**

17. 10. 26. ~ 11. 5.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소재)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중소벤처기업부, NH농업, 광주광역시, 나주시,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관광공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T 한국농어촌공사, EX 한국도로공사

공동주관: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아이쿱(COOP)생협, (사)광주·전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전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2017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소희